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 가능한 기업 만들 것”

김종갑 한전 신임사장, 13일 취임식 갖고 업무 시작

김종갑 한국전력 신임 사장(사진)이 13일 전남 나주 본사에 열린 자회사와 그룹사 대표를 비롯해 한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3년 임기의 김 사장은 취임 일서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과제로 수익성 개선, 공익성과 효율성의 조화, 에너지 전환정책 선도, R&D 투자와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원전 수출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지역 경제 기여 등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우리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발전 자회사와 그룹사 등이 동참한 가운데 실적이 개선 될 때까지 비상경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전은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익성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효율성의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한전에 대표적인 공기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전 수출과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새로운 성

장동력을 찾아내야 지속가능한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대한 빠른 인사로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투명, 준법, 윤리, 환경, 안전 경영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내부 소통과 간막이 없애기, 워라벨 정착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장은 차분하지만 냉철한 외유내강형 성품의 소유자로, 일찍이 관료사회의 경직된 문화에 인간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경영기법을 접목해

야한다고 강조해 왔다.

1951년생인 김 사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뉴욕대와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5년 행정고시 17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차관보 등을 거쳐 특허청장과 노무현 정부 시절 산자부 1차관을 역임했다.

2007년 공직을 마친 뒤 3년간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을 지내면서 경영위기를 겪던 회사를 되살렸다. 2011년부터는 한국지멘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글로벌 기업 지멘스의 한국 사업을 주도해 왔다.

최창봉 기자 ccb1970@



신재생사업자도 출력·예측 정보 제공 책무

산업부, 신뢰도 고시 개정안 마련...발전사업자 책임 강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계통 수용성을 높이고,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 전력거래소와 한전 뿐만 아니라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의 책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개최된 전력계통신뢰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이하 신뢰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이달 26일 열리는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햇빛이나 바람의 조건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달라지는 간헐성(변동성)으로 인해 향후 보급 확대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대정전의 가능성마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금과 1시간, 2시간 뒤 똑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그래서 실시간으로 발전량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의 전력생산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0%가 넘는 국가들의 경우 이미 신재생사업자들이 실시간 입찰시장에 참여할 정도로 생산하는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실시간 데이터 취득은 물론, 예측시스템이나 평가와 제어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뢰도 고시 개정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에 필요한 특성자료와 출력정보, 예측정보, 발전단지 기상정보 등을 전력거래소와 한전에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재생사업자들 입장에서는 RTU(원격단말장치)나 자동연계형단말장치 설치와 통신비용 등 기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부담이 생기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또 계통운영자인 전력거래소와 송배전망 사업자인 한전에도 제어 등에 관한 정보를 신재생발전사업자에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의 경우 신재생발전비중이 높아 지면서 풍력발전 제어횟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5년에는 3회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6회로 늘어났고, 2017년엔 무려 16회에 달했다. 신재생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오버 제너레이션과 발전량이 수시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램핑 현상이 발생하면서 풍력발전 단지의 발전량을 임의로 줄인 것이다.

>>2면에 계속

정형석 기자 azar76@

“3차 에기본의 정책 중심은 에너지 민주주의”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지원정책국장, “국민과의 소통, 지역분권형 강화” 에너지전환 촉진 위한 세울 조정 전망...석탄 세울 ↑ LNG 세울 ↓ 예상

2040년 국가에너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 중심은 ‘에너지 민주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에너지미래포럼(대표 이재훈) 주최로 웨라투서울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제4차 에너지미래포럼에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지원정책국장(사진)은 “워킹그룹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3차 에기본의 정책 기본 컨셉은 에너지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며 “수요관리와 효율개선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공급에 담당하는 프로슈머가 확대되고, 공급분야도 중앙집중 체계에서 분산형, 지역분권형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참여분권형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5개 워킹그룹에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70여명을 포함시켰다”며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4월 중에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4개 권역별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업계의 가장 관심 사안 중 하나인 에너지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계 당국에서는 세수 중립적인 개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원간의 세율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석탄의 세율을 올리고, 친환경적인 LNG의 세율을 낮추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해외자원개발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말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안 발표로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해외자원개발을 현 정부가 축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광업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 베이스로 개발하는 추세여서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지만, 석유와 가스는 공사와 민간이 적절히 역할을 배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자주개발률 40% 등의 허구적인 수치를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앞으로의 정책 방

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쯤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또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북방 경제협력과 남방정책 등에서 에너지 분야의 역할과 관련해 “에너지 분야도 당연히 다른 나라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동북아 슈퍼그리드, 가스 협력사업 등 정부가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전력원가 상승과 관련해 원가연동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패널 질문에 대해 “에너지요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에너지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사회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가격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후 원전과 석탄 폐지 지역의 향후 활용 방안과 관련해 “노후 석탄과 원전이 입지한 해당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에너지융복합 클러스터 제도나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등을 활용해 해당 부지의 대체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정관 전 산업부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04년 자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에너지기본계획에 참여했던 기억이 새롭다”며 “3차 에기본에서는 갈등·소통분과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소통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민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계다. 정부만의 계획 수립은 의미가 없는 만큼 정책 파트너로서 에너지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

KS 인증업체
보행안내표지
가로등분전함
영인글로벌 Tel 032-575-0660

다행히도...
대한민국...
2018년 4월 16일

Compact
DC Switch Disconnector
세계 최초 DC 1500V

DC 기중차단기/개폐기
사이즈는 DOWN! 성능은 UP!
친환경까지 생각하는 프리미엄급 DC 시리즈

LS산전 | 서울 02)2034-4578~9 대구 053)603-7711~5 광주 062)510-1811~5 대전 042)820-4203~5
부산 051)310-6821~4 고객센터 전국 어디서나 1544-2080 http://www.lsis.com